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4-5호 | 2024년 3월 11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정태호 | idp.theminjoo.kr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하는 자세: “못살겠다, 심판하자.”

-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한상익 수석연구위원(정치학박사)

《요약》

■ 4.10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정부 성과와 미래 국정방향을 결정

- 국민이 윤석열정부의 2년을 평가하고 이후 3년 국정방향과 국가의 미래를 선택하는 계기
 - 윤석열정부 2년을 칭찬하고 격려할 것인가, 윤석열정부 2년을 비판하고 심판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대로 3년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정부의 변화를 촉구할 것인가를 결정

■ 윤석열정부의 2년은 무지와 무능, 무책임, 불통과 불공정으로 점철되어 있음.

- 윤석열정부는 경제와 민생에서 ‘마이너스(-)의 손’
 -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무역수지, 외환보유액, 가구 자산과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줄줄이 줄어드는데, 물가, 가계부채, 가계 이자, 근로소득세 등 부담은 증가
- 대통령 가족과 측근은 범죄 혐의가 있어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
 - 감사의, 감사에 의한, 감사를 위한 고위직 인사, 가족과 측근 특검은 거부.
- 모든 책임은 ‘남’과 ‘하위직’만이 지는 고위직 ‘무책임’
 - 참사와 실패에 대통령, 장관, 집권당 대표는 책임이 없고 실무자만 재판행
- 대통령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우김질과 입틀막으로 점철된 불통
 - ‘날리면’ 전국민 듣기평가를 강요하고, 고소와 입틀막으로 비판은 거부
- 한국 미래를 어둡게 하는, ‘내일’이 없는 정권
 - 무한 기술경쟁 시대에 R&D 예산을 삭감하고 기후 위기 경제는 나몰라하는 정부

■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하지 않으면 윤석열정부는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 해석해 현재의 국가운영 방식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영속화할 것.

- ‘눈 떠보니 후진국’이 아닌, ‘다시 선진국으로’의 길은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음.

▶ 키워드: 22대 총선거 의미, 윤석열정부 2년의 성과, 윤석열정부 심판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민주국가의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의미

1.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의미 : 정부 성과 평가와 미래 국정 방향 제시

-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현재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미래 국정 방향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제도
 - 유권자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를 통해 기존 권력의 행동과 성적을 평가하여 보상하거나 심판하고,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를 통해 미래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권력을 위임
 - 국가 운영을 책임진 정부와 집권당은 국정운영 성과를 보상받고, 현재 국정운영 방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승인받는 계기이며, 야당은 정부-집권당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정운영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는 기제로 활용

2.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 윤석열정부 2년 평가와 이후 3년의 결정

- 윤석열정부와 집권당 국정운영을 칭찬하고 격려할 것인가, 심판하고 견제할 것인가 /지금과 똑같이 3년 더 갈 것인가 아니면 국정운영 기초를 바꿀 것인가?
 -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2022-2023) 국정운영 성과에 만족하고 국정 방향에 동의하는 유권자는 집권당의 선거 승리를 선호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에 비판적이고 쇄신을 요구하는 유권자는 야당의 선거 승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음
 -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과반 의석 점유/제1당이 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현재와 같은 국정운영 방향과 자세를 유지하도록 승인하는 것이며 민주당과 우호 정당들의 과반 의석 이상 획득은 윤석열정부에게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는 것
- 윤석열정부 2년은 윤석열정부가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 불통과 불공정을 심판하고 국정 쇄신을 촉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보여줌

□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윤석열정부를 심판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1. 경제와 민생 위기 : 윤석열정부, 국민 경제 마이너스(-)의 손

- 중요한 경제와 민생 지표들이 줄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문재인정부 마지막 성적표인 2021년과 윤석열정부 2년 성적표인 2023년을 비교할 때,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특히 1997 외환위기, 2008 금융위기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 국가들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만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윤석열정부를 ‘마이너스의 손’이라 할 만함
 - 한국 경제에 영향력이 큰 미국은 2023년 2.5%, 중국은 5.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일본도 1.9%를 기록, IMF 외환위기 이후 최초로 일본에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함
 - 윤석열 2년간 한국인 대부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해졌음
 - 실질임금은 월평균 4.5만원 줄어들었으며, 자산에서 빚을 제외한 순자산도 1,422만원 감소

표1) 주요 경제/민생 지표의 마이너스 성장

구분	경제 성장률(%)	수출 증가율(%)	무역수지 (억달러)	외환보유액 (억달러)	노동자 월 평균 실질임금 (만원)	연구개발 (R&D)예산 (조원)	가구평균 순자산 (만원)
2021년	4.1	25.7	448.6	4,631	359.9	27.5	40,441
2023년	1.4	-7.4	-103.5	4,201	355.4	26.5	39,019
감소율(%)	-65.9%	-128.8%	-123.1%	-9.3%	-1.3%	-3.6%	-3.5%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K-stat, 언론보도 종합)

○ 경제·민생 개선 지표들은 마이너스(-)인데, 국민 부담 가중 지표들은 줄줄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도 부자감세만은 용감하게 감행

- 서민/중산층은 가난해졌는데 물가, 이자 부담액 등 국민 부담은 2년간 대부분 크게 증가
 - 2년간 가구 전체 명목소득은 6.9% 증가한데 비해 소비자물가지수는 8.9%나 상승해 가계 실질 소득은 2% 감소한 반면, 월평균 이자부담액은 51.8%나 상승, 10만원을 훌쩍 넘었음

표2) 주요 경제/민생 부담의 증가

구분	가계부채 총액 (조원)	자영업자 대출연체액 (조원)	가계월평균 이자부담액 (원)	물가 상승률 (%)	소비자 물가지수	대기업 감세액 (조원)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2021	1,862.9	2.6	85,624	2.5	102.5	3.9	113.7
2023	1,886.4	7.3	130,007	3.6	111.6	6.6	126.1
증가율(%)	1.3%	180.8%	51.8%	44.0%	8.9%	69.2%	10.9%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K-stat, 언론보도 종합)

- 세입예산 대비 14.1%나 부족한 56.4조원의 세수 핑크에도 불구하고 고액 자산가들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기업에는 각종 감세로 70% 가까이 감세액 증가

2. 인사와 법치 불공정: 대통령 가족과 주변 인사는 고위직에 치외법권

○ 감사의, 감사에 의한, 감사를 위한 정부

- 정부 출범때부터 대통령실 비서관, 장차관 및 실장 등 1급 이상 고위직에 임명된 검찰 출신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비해 평균 6.4배 많음

표3) 역대 정부 첫인사 당시 검찰출신 고위직 명수 현황

구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검찰 출신 정부 1급 이상 임명직	5명	6명	2명	21명

(출처: 국민일보, 2024.1.8)

-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서울대병원, 마사회 등 공공기관 이사/감사는 18명, 삼성전자, 두나무 등 민간기업 이사 이상은 29명(알리오 및 기업 공시자료/홍영표 의원실)
- 전문성에 대한 비판에는 금융 수사를 해봐서 금융감독원장, 규제 수사 해봐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있다 주장
 - 검사가 의사 범죄 수사를 하면 병원장도 시킬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

○ 남들은 법을 지켜야 하지만 나와 내 주변은 어겨도 되는 윤석열정부식 ‘법치’

- 비판자와 야당에는 수사와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기소하면서 대통령과 가족, 주변인사는 수사도 안하거나 사면을 남발
 - 이재명 대표와 가족은 2023년 1월~6월까지 총 36회(검찰 주장), 376곳(민주당 주장)이 압수수색 되었고 야당 대표 부인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원 썼다고 기소된 반면, 수십억 주가조작 혐의, 수백만원대 명품백 수수로 뇌물죄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수사도 하고 있지 않음.
 - 조국 전법무부 장관은 자녀 허위 스펙으로 검찰은 1년 3개월 수사, 5년 징역 구형했지만, 한동훈 전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웹사이트 표절, 허위 봉사시간 등 11개의 의혹은 아예 불송치
 - ‘고발 사주’ 유죄 선고를 받은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국가기밀 누설로 유죄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3개월 만에 사면시켜 다시 보궐선거에 공천
- 야당 대표와 공천 후보를 범죄자, 음주운전자라 비판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확정한 공천확정자 213명(3.8 기준)은 다섯 명중 한 명인 43명(20.2%)이 전과가 있고 이 중 음주운전 전과자만 17명(8%)
 - 주로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관련 전과가 많은 민주당과 달리 26.9%가 전과를 가진 국민의힘 호남 후보들은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예산관리법, 폭행 등 파렴치범 전과가 많으며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
-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는 거부권을 남발하고 가족과 측근이 포함된 사건의 진상조사는 봉쇄
 - 대통령 본인과 주변 인사가 포함된 50억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은 거부권으로 무산시키고,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 해병대 사병 사망 사건, 처가 관련 의혹이 있는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및 특검은 정부와 여당이 원천 봉쇄
 - 해병대 사병 사망사건 관련된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 해외로 내보내 공수처 수사를 방해

3. 정치와 행정 무책임: 모든 책임은 ‘남이’ 진다(The buck stops there).

○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탁상패를 받은 것을 자랑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국정운영으로 일관

- 경제와 민생뿐만 아니라 대형 참사, 대형 행사 유치와 운영 실패 등 사안에 아예 입을 닫거나 책임을 자신과 자신 측근 이외의 남에게 떠넘기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을 적반하장으로 비판하거나 무시하고 심지어 탄압

○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와 해병대 사병 사망 사건 등의 책임은 하위 실무자가 지고, 잼버리 파행, 부산 EXPO 유치 실패 등 대형 정책 실패 책임은 모르쇠

-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압사당하고 196명이 부상한 대참사 책임은 경찰 실무자에게 넘기고 해병대 사병 사망 사건은 적반하장

- 이태원 참사 주무장관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장관은 아예 책임 소재에서 빠지고 실무자인 경찰서장, 112 상황관리관 등만 기소
- 해병대 사병 사망사건에 사단장 책임을 적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하고 최종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은 2023년 12월에야 입건했으며, 수사에 외압 행사 혐의가 있는 이종섭 전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 해외도피와 수사 방해 의혹을 자초
- 5,7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파리 총회에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총출동하고서도 고작 29표(1표당 198억원) 얻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은 아예 없음.
-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공동 운영위원장인 세계 잼버리가 각국 대표단 철수와 국제적 항의라는 대망신을 당했는데도 책임은 전라북도 와 전정권에 미루고 사후 수습은 재벌과 기획사에게 떠넘김.

○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은 야당과 야당 대표만 집요하게 비난하는 ‘스토킹 정치’로 국정 책임을 방기하고 대통령은 900조원대로 추산되는 무책임한 선심 공약만 남발

- 한동훈 집권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 민생 위기와 특검 거부권 남발 등 국정 관련 사안에는 말이 없고 매일 야당을 비난하고 야당 대표를 스토킹하며 비아냥만 몰두
-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운영이라는 대통령의 기본 책임은 저버리고 전국을 돌면서 책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을 받는 공약 발표만 감행

4. 입틀막 불통과 언론장악 :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어라

○ 소통 요구에 답변 없이 입틀막과 형사 고발로 응수하는 사상 최악의 불통 정부

-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9개월간 공식기자회견 0회에 빛나는 불통 대통령
 -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역대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3~4회, 국내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2~5회 등 연평균 2회 이상에 비해 윤석열 대통령 공식기자회견은 연평균 0.5회
- ‘바이든-날리면’ 발언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데, 정작 발언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을 밝히지 않고 윤석열정부는 MBC를 고소
 - 김건희 여사 관련 언론사 고소(뉴스토마토, 한겨레, 더탐사 등),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고소(KBS) 등을 포함, 2개월에 1.1회꼴로 언론사를 고소/고발하여 미국 국영매체인 VOA조차도 이례적으로 보도하는 국가 망신을 자초

표4) 역대 정부 언론사/기자 고소고발 횟수(역대 정부는 5년, 윤석열정부는 20개월)

구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언론사/기자 고소고발횟수	7건	8건	4건	11건

(출처: Voice of America, 2023.2.10.)

-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국정 운영에 관해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국민들의 입을 경호원들이 강제로 틀어막고 끌어내는 사상 초유의 ‘입틀막’ 사건이 빈발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회의원 입틀막(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성희의원), KAIST 졸업생 입틀막(KAIST 졸업식: 신민기 졸업생), 의사 입틀막(의료개혁 민생토론회: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적반하장

그림 1) 호소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입틀막’의 현장



(왼쪽부터 KAIST 졸업생 신민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임현택, 국회의원 강성희)

○ 집요하고 탈법적인 언론장악 기도에 외국 언론들도 ‘민주주의 훼손으로 군사독재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 봇물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을 탈법적으로 장악하고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며 언론인들을 축출
 -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방통위는 야권 인사를 축출하여 2인 체제로 운영하다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회전문 임명
 - 9인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은 청부 민원을 자행하며 이에 항의하는 비판 위원들을 강제 해촉하여 7인체제로 운영하다 법원 판결로 다시 8인이 되는 파행
 -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등 방송인에게는 무더기 징계를 내려 방송 하차시키고 친윤석열 정부 성향인 박민을 KBS사장으로 임명하여 KBS 소속으로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의혹을 보도하거나 비판한 아나운서, 방송인, 기자들을 퇴직, 좌천
-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들은 윤석열정부의 언론 탄압과 장악을 앞다투어 비판
 - 미국 뉴욕커는 “군사독재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정부가 언론검열의 우려”, 프랑스 르몽드는 “윤석열정부가 검열과 언론 통제” 등의 기사로 비판

5. 망가지는 한국의 미래 : 윤석열정부에 ‘내일’은 없다

○ 미래 기후위기 대응 경제에 중요한 ‘RE100(신재생에너지 100%)’은 모르는 얘기, 기술 혁신 경쟁 시대를 헤쳐나갈 기반인 R&D 예산은 삭감하는 ‘미래 포기 정부’

- 기후 위기를 맞아 Apple, Google, Microsoft, Intel, GM, 화이자 등 주요 혁신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였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LG엔솔 등이 가입했으나, 정부 대응은 낙제점
 - RE100 무대응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치명적인 흐름이며, 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2040년 반도체 수출액이 31%나 감소할 위험 존재(KDI 보고서) 등 한국 미래 경제에 당면한 위협이 될 것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RE100” 자체를 몰라 망신을 샀고, 정부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43%나 삭감, 제출해 세계적인 미래 기후경제 대응에 역행하면서 국제 경제적으로 별 호응이 없는 CF100을 내세우는 무대책으로 일관

- AI, 로봇, 블록체인 등 미래 경제를 좌우할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2024년 R&D예산은 4조 6,000억원(-14.7%) 삭감
 - 한국 기술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은 R&D 예산을 10%나 증액하여 한국보다 2.6배나 많은 약 68조 7,000억원을 투자하는 데 비해 한국은 오히려 삭감
 - R&D 예산 축소에 항의하는 KAIST 공학도의 발언을 ‘입틀막’으로 제압

○ 세계 외교안보 구조의 급변에도 ‘이념’에만 올인하는 글로벌 외교, ‘친일반중’ 일변도 동북아외교, 한반도 안보 위기를 증폭하는 이념적 대북정책으로 한국의 미래를 위협

- 미국 주도 1극 체제에서 중국과 BRICs의 부상, 유럽의 퇴조, ASEAN과 Africa의 대두 등 신질서 이행 혼란기의 글로벌 외교에서 이념 외교로 일관, 미래 실익 외교를 포기
 -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논두렁 가운데 선 소처럼 양쪽 풀을 모두 뜯어먹을 수 있는 실리 외교”가 유일한 외교 노선이라 말씀하시고 실천
 - 이념 외교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각기 수출이 -23.4%, -38.6% 줄어든 것에 비해 미국은 20.6% 성장, 일본은 심지어 -3.5% 줄어들었고, 특히 중국과는 243억달러 흑자가 -180억불 적자로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

표5) 2년간 주요국 수출 규모 및 증가율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2021	959	300.6	1,629	99.8
2023	1,156.9	290	1,248	61.3
증감율	20.6%	-3.5%	-23.4%	-38.6%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단위 억달러)

- 친일 일변도 동북아 정책은 중국에게는 ‘무시받는 외교’, 일본에게는 ‘잘해주고 뺨 맞는’ 외교를 반복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2024년 신년 외교관 리셉션에서 ‘미국 관계 호전, 일본과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의례적 언급도 하지 않고 투명국가 취급
 - 일본은 한국의 친일 일변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및 후쿠시마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한국 법원의 징용 배상 무시 등 기존 자세를 유지하며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등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 반복
- 윤석열정부의 대북한 강경일변도 정책, 평화체제 방기 정책에 북한도 미사일 도발, 전쟁위협, 한국 적대국 선언 등으로 한반도 위기를 양쪽에서 부추기고 있음.
 - 윤석열정부는 반통일인사인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고, 통일부의 인원을 80여명 줄이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해체하는 등 반평화정책으로 일관
 - 북한도 2023년에만 30회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러시아와의 밀착 외교로 미사일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등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킴

○ **윤석열정부는 한국의 미래 생존과 번영에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정부**

- 국제 교역으로 번영하고 생존해야 하며, 한반도 위기 차단이 국민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한국에서 윤석열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념 외교 정책은 미래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
 - 기후위기에 무지하고 미래 글로벌 기후 경제, 기술 경제 대응에 무능하며, 이념 외교로 한국인의 생존과 번영에 역행하여 한국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음.

□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윤석열정부에게 경고하고 더 이상의 퇴행과 역행을 막아 다시 선진국으로 복귀하는 계기**

○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윤석열정부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영속화시키려 할 것.**

-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를 가지고 있었기에 윤석열정부의 퇴행, 역행이 법률로 영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가족과 주변 측근의 문제와 의혹을 공론화하여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었음.
 - 경제와 민생에서의 무능을 심판해야 경제/민생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고,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의 책임 의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불통과 언론 장악을 견제할 수 있음.
 -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 해병대 사병 사망 사건 등의 의혹을 특검을 통해 해소하고, 측근 검사를 비롯한 전횡을 견제하고 책임을 지우려면 윤석열정부 심판이 이루어져야 함.

○ **2021년 세계 경제규모 10위, 선진 민주주의 10개국(D10) 멤버로 거론되었던 한국은 2323년 멕시코보다 GDP가 작아진 경제 규모 13위, '독재화 진행 국가'로 전락**

- 전세계 4,200여명의 전문가가 평가하는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의 '민주주의 지수' 한국 순위는 2021년 17위(0.79점)에서 2023년 47위(0.60점)로 급전직하
 - 한국을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되고 있는 42개국중 하나로 분류
- 윤석열정부의 무지와 무능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천박함과 무책임은 국격을 지하층을 뚫고 밑으로 떨어뜨리고 있음
 -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낮은 경제성장률(러시아 2.6%), 사과와 감자 가격이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생활물가, 국제회의에서 미국, 중국 등과 정상회담도 제대로 못하고 순방중 대통령 부인의 명품 쇼핑이 해외 언론을 장식하는 나라가 되었음

○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든 윤석열정부를 심판하고 '다시 선진국으로' 희망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민주개혁진영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윤석열정부 심판을 절실하게 호소해야 할 것임**